

尹, 인적쇄신·예산안 등 과제 산적

尹, 중남미 순방일정 동안 정국 격양
野, 李 1심 선고 결과에 대정부공세
사정기관 특활비 등 삭감 주장

총리 개각 위해선 野 동의 얻어야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에 대치 전방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마련도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참석을 위한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21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당분간 개각 및 인적 쇄신, 2025년도 예산안 통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대비 등 난제 해결에 집중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날 오전 5시 58분께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공군 15특수임무비행단장 등이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추경호 원내대표는 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새벽인데) 수고스럽게 공항에 안 나와도 된다'는 뜻을 당에 전했다.

윤 대통령이 순방 일정을 소화하는 사이, 국내 정국은 더 복잡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야당은 한층 격양된 상태로 대정부 공세를 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667조원 규모의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야당에 협조해야 하는 것이다. 예산 심사 중인 야당은 검찰·감사원 등 사정기관 특활비·특검법·특검법, 동해 유전 개발, 마음투자 지원 예산, '개 식용종식' 예산 등을 삭감하겠다고 버리고 있다.

인적 쇄신 역시 윤 대통령의 해결 과제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임기 반환점을 맞아 진행된 대국민담화·기자회견



APEC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에서 인적 쇄신을 공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인적 쇄신을 위한 인재 풀 탐색 및 검증 작업을 진행해왔다. 본격적인 개각 등 인적 쇄신 작업은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된 이후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에서 인사검증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정치권에서 각종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재직해온 데다가 지난 총선 직후 사의를 표명하기도 해, 교체설이 돌고 있다. 이외에도 행정안전부·교육부·복지부 등 장관이나 국정원장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에 개각 폭이 상당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제는 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인물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거기다 야당은 이재명 대표 재판 등으로 여권에 대한 반감이 높은 상황이라, 인준 과정이 험난할 수 있다.

야당과의 대치 국면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재의요구 시한은 오는 29일까지다. 지난 19일 국무회의에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예정이었지

만, 한 주 늦춰 26일에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권 행사에 나설 경우 야당의 반발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특검법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밝혔던 한 만큼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기에 오는 25일에는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 마련도 윤 대통령이 마주할 현안이다. 중남미 순방을 계기로 추진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은 불발됐지만, 양측 모두 한미협력 강화에는 공감대를 표한 상황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순방을 앞두고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열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기회 요인과 위기 요인을 점검했다. 이 회의에서 경제부총리를 컨트롤 타워로 하는 금융, 통상, 산업 3대 분야의 회의체 가동을 지시했고, 안보 분야의 경우 구조적 변화 가능성을 주시할 것을 주문했다. 러북 군사협력 대응, 대북 억제력 강화, 방산 등 다양한 현안에서 협력을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집중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 시행 “2년 유예” vs “공제한도 상향”

(興)

(野)

국민의힘 “과세시점 2027년으로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민주당 “기존 250만원 → 5000만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유예 없이 공제한도만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2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고 나서고 있어 입장이 팽팽하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 기본공제 한도액을 기존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는 '큰손' 투자자 과세와 일반 투자자 부담 경감을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관련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가상자산 과세시점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국민의힘도 이에 적극 찬성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과세 유예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국내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해 '폐지'에 손을 들었지만, 가상자산은 유예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총선 당시 가상자산 공제한도를 5000만원까지 상향한 공약을 내걸었으며,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이 22대 국회 들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5000만원을 한도로 정한 것은 금투세 공제액과 형평성을 위한 것이었다. 또한 최근 급등한 가상자산 가격과 투자자들의 반발을 고려한 회유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주장하면서 야당을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

는 것엔 동의하지만, 그 과세는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2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가상자산은 어떤 큰 거래소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이나 외국에서도 할 수 있다 보니, 지금 현재 우리의 준비 상태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며 “그런 이유에서 우리 정부 당국에서 아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2년간 유예하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과세했을 때 그 혼란을 어떻게 책임지겠다는가”라고 지적했다.

가상자산이 청년 자산 형성의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800만 명이 넘는 우리 국민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하고 있다. 그중에 또 대다수는 청년”이라며 “가상자산 가격이 오랜만에 올라가 손실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민주당이 그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전날에도 “청년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청년들 부담을 줄이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착각하고 있다. 이 건 국민의힘이나 정부와 싸우는 게 아니라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경우, 가상자산에 투자해 연간 250만원이 초과하는 소득을 얻은 이들은 20% (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을 내야 한다.

앞서 2020년 정부는 입법 과정에서 시행 시점을 2022년 1월 1일로 규정했지만, 과세 인프라 미비로 2년 유예한 바 있다. 그러나 시장 불안정을 이유로 2025년 1월로 연기했고, 2027년도로 또 다시 미루는 세 번째 유예안을 추진 중이다. /서예진 기자

한동훈 “당 차원 민생경제특위 구성… 민생정책 체감”

야당과 차별화 위해 민생행보 추진
중도층 겨냥… 지지율 상승 전략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당 차원의 민생경제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저희의 민생정책을 더 체감하실 수 있게, 국민들이 원하는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준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우리는 국민 모두가 민생이 조금씩 나아지는 현실적 우상향 성장의 과실을 복지로서 누리게 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서 “2024년도가 40여일 남았기 때문에 그동안 정책으로서 (추진)했던 것을 되돌아보고,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 집중적으로 더 실현해보자”고 주문했다.

이어 “주식시장이나 신성장산업, 노동 약자, 사회적 격차, 지역 격차 등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치적 카테고리를 넘어서 꼭 필요한 현실의 문제를 민생경제특위에서 논의하고 실천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 대표는 야당과의 차별화를 위해 민생 행보를 계속했다. 지난 1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실을 찾아 지도부와 정년 연장 등 노동정책을 논의했다. 같은 날엔 중소기업인 간담회에도 참석해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대출금리 인하와 육아휴직 시

대체 인력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에 국민의힘 민생경제특위는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발목이 잡힌 야당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정책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출범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취임 이후 꾸준히 중도층을 겨냥한 행보를 해왔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계기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서예진 기자

홍철호, ‘기자가 대통령에 무례’ 발언 사과

(대통령실 정무수석)

“대국민담화·기자회견 답변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점 사과”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 사과의 의미를 질의한 기자에 대해 “무례했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사진)이 21일 사과했다.

홍 수석은 이날 대통령실 공지를 통해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관련 답변 과정에서 정무수석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점에 대해 부산일보 기자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고 밝혔다.

이어 “정무수석으로서의 본연의 자세와 역할을 가다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수석은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가 (대통령에게) 어떤 것에 대해 사과한 거냐 했는데 답을 못했다”고 묻자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

고 생각한다”고 답변해 물의를 빚었다.

홍 수석은 당시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 마치 어린아이들께 부모가 하듯이 ‘뭘 잘못했는데?’ 이런 태도는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이에 대통령실 지역기자단은 전날(20일) 입장문을 내고 “태도를 시정해야 한다”는 것은 기자들에 대한 ‘눈치주기’로, 지역기자단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수석이 언급한 부산일보 기자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기자회견 당시 “대통령님께서서는 주변의 일로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렸다”고, 어떻게 보면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으로 사과를 하셨다. 국민들이 과연 대통령께서 무엇에 대해 우리에게 사과했는지 어디로질 할 것 같다. 여기에 대해 보충 설명해 주실 수 있는가”라고 질문한 바 있다. /서예진 기자